
남 북 대 화

어떻게 되고 있는가



국토통일원

남북간의 대화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일까?

민족통일을 향한 구체적이고도 가시적인 성과는 과연 언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를 놓고서 또 다시 의문과 회의에 빠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우리들이 온갖 정성을 들여 추진해 온 남북대화가 일시 중단되어 교착상태에 빠졌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이제 닫혀버린 남북대화의 문을 다시금 열고, 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를 더욱 가다듬어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7·7 선언을 내놓는 등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 협력시대를 열어 나가자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통일정책을 펴왔다. 또한 민족공동체를 회복하여 민족공영의 새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과연 남북대화에 임하는 남북의 기본입장은 무엇인가?

이러한 남북간의 기본입장은 바로 남북대화와 통일추진의 현재와 앞날을 밝혀주는 것으로써 우리들이 통일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아, 이 자료를 엮어 내놓는다. 유익한 자료로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

차 례

남북대화, 어디까지 왔나

80년대 전반기 대화 / 5

80년대 후반기 대화 / 9

북한, 왜 대화를 연기했는가

남북대화에 관한 북한의 기본 의도 / 14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과 체육회담의 연기 배경 / 18

남북문제, 우리의 기본 입장은 무엇인가

『7·7 대통령 특별선언』의 바른 이해 / 20

남북대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 / 22

통일을 향한 우리의 진로

건전한 통일외지의 결집—정부의 실천조치 / 24

북한도 인식의 대전환을 / 25

민족공동체의 형성과 발전 / 26

남북대화, 어디까지 왔나

80년대 전반기 대화

1984년 11월부터 1985년말 사이에 남북간에는 적십자회담 3회, 경제회담 5회, 국회회담 예비접촉 2회 등, 대화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교환이 실현되기도 했다.

비록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또한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주관하에 로잔느 남북체육회담이 1985년 10월부터 1987년 7월 사이에 4회에 걸쳐 개최된 적도 있다.

남북적십자회담

남북한은 1972년 6월 16일 제20차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에서 ① 이산가족의 주소, 생사의 확인 ② 방문, 상봉의 실현 ③ 서신거래 ④ 재결합 ⑤ 기타 인도적 문제 등 5개항의 의제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

이상과 같은 의제를 가지고 우리측은 85년 12월에 열린 제10차 회담에서 5개항 의제의 항목별 실천방안을 다함께 제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토의하고 해결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산가족의 남북자유왕래가 위 5개항 의제에 대한 실천방도의 하나라는 인식을 토대로 자유왕래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제2의 고향방문단 교환을 아울러 제의하

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산가족문제 해결방도중의 하나에 불과한 자유왕래문제가 해결되면 의제 5개항 사업이 포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자유왕래문제를 우선적으로 토의, 해결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북한측은 남북이산가족의 자유왕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남한의 반공태세가 철폐되어야 한다는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 하면서 우리측이 제의한 제2의 고향방문단 교환제외에 대해서도 거부반응을 보였다.

북한측이 이처럼 남한의 반공태세철폐를 겨냥한 자유왕래를 주장하면서도 제2의 고향방문단 교환을 거부한 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사회를 개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제회담

1984년 11월에 열린 제1차 경제회담에서 남북한은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서로의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쌍방 제안에서는 교역품목,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경의선 철도연결문제 등에 공통된 의견접근을 보였다.

더욱이 물자교역에 있어 쌍방은 무연탄, 철광석, 마르네샤크 링카, 옥수수, 명태, 철강재, 섬유 등 7개품목의 교류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그후 제2차회담에서 돌연히 태도를 바꾸어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현재의 회담 대신 부총리급을 위원

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먼저 구성하자고 주장함으로써, 이미 의견 접근을 보인 물자교역과 경제협력에 대한 구체적 토의진전을 가로막고 나섰다.

그후 우리측은 북한측의 경제협력기구 설치주장을 수용함과 아울러 이미 의견접근을 보인 부분을 살려나가기 위해 『남북간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 추진과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합의서』 채택을 제시, 북한측이 이에 호응해 옴으로써 합의서 초안을 놓고 일단 의견조정에 착수하였으나, 북한측의 불성실한 자세로 인해 회담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요컨대 북한측이 서로 의견이 일치된 무연탄 판매 등 당장 실현가능한 물자교류를 거부하고 남북경제회담의 격상문제 등을 앞세워 회담진전을 지연시킨 것은 남북물자교류가 이루어질 경우, 결과적으로 북한경제의 취약성만 노출시키게 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1985년 7월, 제1차 예비접촉에서 부터 국회회담의 의제에 관해 쌍방간의 의견대립은 회담을 어렵게 하고 말았다. 우리측이 『통일헌법을 기초하기 위한 민족통일협의회 기구를 구성하는 문제와 이에 따른 통일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회담의제로 제의한데 비해, 북한측은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불가침선언 문제는 기본적으로 책임있는 당국간에 협의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굳이 이 문제를 제제로 내세운 것은 남북국회회담 차원에서 먼저 불가침선언을 하도록 한 후, 미국·북한간 평화협정 체결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이른바 『3자회담』의 공식대로 물고 가자는 데 그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측의 대화중단

북한측은 86년에 접어들어 우리측의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세 갈래의 회담을 중단시켰다.

북한이 대화중단 구실로 내세운 팀스피리트 훈련은 1976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한 것으로서 그 규모, 일시 및 지역 등이 모두 공개되는 방어적인 공개훈련으로 대화추진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다. 더욱이 이 훈련에 대한 북한측의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 우리가 북한측에 사전 통보는 물론, 참관할 수 있도록 초청까지 해오고 있다.

또한 남북간에는 팀스피리트 훈련이 진행중이던 76년, 77년, 79년, 80년, 84년에도 대화를 진행한 바 있다. 뿐만아니라 북한측이 해마다 동해상에서 소련해군과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우리측에 대해 팀스피리트 훈련중지를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않는 주장인 것이다.

80년대 후반기 대화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이 북한측의 거부로 말미암아 중단된 지 근 3년이 지난 1988년 8월 19일, 쌍방 국회대표들은 판문점에서 또다시 접촉을 갖고 국회회담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우선 국회회담의 형식과 관련, 우리측에서는 『개회모임』, 『의제토의를 위한 모임』, 『폐회모임』순으로 진행하되 『의제토의를 위한 모임』을 각기 50명의 대표가 참가하는 쌍무적 성격의 『대표회담』으로 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은 『의제토의 모임』을 연석회의 방식의 『대표회의』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회담의제에 있어, 우리측이 ①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재개문제를 포함한 남북간의 다각적 교류·협력문제 ② 남북 불가침선언문제 ③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 등으로 할 것을 제의한데 반해, 북한측에서는 처음에 ① 남북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문제 ② 남북간 다방면적 교류·협력문제로 하자고 하다가 제7차 접촉시에는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문제를 제1의제로 토의하자고 엉뚱한 주장을 내놓았다.

북한측이 국회회담을 연석회의 방식의 『대표회의』로 하려고 한 것은 남북관계 현실에 대한 상호인정(쌍무적 관계)을 거부하고 일종의 다중집회 방식인 통일전선식 대화에 의한 우리사회의 국론분열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또 회담의제에 관해 북한측이 제7차 접촉에 와서 갑자기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문제를 제1의제로 설정하자고 한 것은 이 준비접촉을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를 위한 선전장화함으로써 사실상 본회담으로까지 진전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겠다.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

쌍방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예비회담이 1989년 2월 8일과 3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판문점에서 열렸다. 이 회담에서 쌍방은 본회담 명칭문제와 의제문제, 대표단 구성문제 그리고 제1차 본회담의 개최장소문제 등에 관해 서로의 입장을 개진하였다.

본회담 명칭에 관해 우리측에서는 『남북고위당국자회담』 또는 절충안으로 『남북총리회담』을 제시한 반면 북한측에서는 『쌍방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북남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으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의제에 있어서는 우리측이 상호 중상, 비방중지문제 등 6개항 (① 비방·중상중지 ② 상호존중 ③ 교류·협력 ④ 군사적 신뢰구축 ⑤ 정상회담 ⑥ 기타문제)을 제의한데 대해 북한측은 『남북간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로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두차례에 걸친 예비회담은 한번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북한측이 팀스피리트 훈련중지문제와 우리

정부의 북한출판물 단속문제와 같은 회담과는 전혀 관련없는 문제들을 잇달아 거론함으로써 실질 문제토의를 기피하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북한측은 2차회담에서 이른바 3개항의 『긴급제안』이라는 것을 내세워 팀스피리트 훈련중지를 전제조건화함으로써 회담의 진전을 가로막고 나섰다.

이것은 마치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잣밥에만 눈을 돌리는 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체육회담

90년 북경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남북단일팀 구성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이 지난 84년 체육회담이 중단된 지 5년만인 89년 3월 9일, 다시 열렸다.

그동안 두차례에 걸친 회담에서 쌍방은 선수단의 단가를 『아리랑』으로 하고 단기는 『회색바탕에 단색의 한반도 지도』를 그려넣으며 『합동훈련을 통해 선수를 선발』한다는 등 몇가지 사항에 의견의 접근을 보았다.

그러나 단일팀의 호칭문제에 있어 우리측은 우리말로 『남북단일팀』, 영문으로 『Korea』로 할 것을 제의한데 비해 북한은 우리말로 『고려팀』 영문으로 『Korea』로 하자고 함으로써 의견 차이를 보였으며, 구체적인 선수선발 방법과 선수훈련, 선수단 구성 등에 있어서도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체육회담은 다른 회담과는 달리 비교적 순조로운 분

위기속에서 토의를 진행하여 온 셈이다.

북한의 회담연기 선언

북한은 89년 2월 8일, 국회회담 준비접촉 북측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팀스피리트 훈련을 비난하면서 2월 10일로 예정된 제8차 국회회담 준비접촉을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또 89년 4월 17일, 북한은 문익환씨에 대한 사법처리와 관련, 4월 26일로 예정된 제3차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을 7월 12일로 연기하고 4월 18일로 예정된 제3차 체육회담의 날짜를 7월 18일로 연기한다고 우리측에 통보해 왔다.

북한측 체육회담 단장은 이 통지문에서 『귀측 당국이 문익환 목사를 불법 부당하게 구속함으로써 화해와 완화의 길로 나가던 남북관계를 대결과 긴장격화의 방향으로 역전시키고 있다』고 회담연기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 북한측이 이처럼 팀스피리트 훈련문제와 문익환씨 구속 문제를 핑계삼아 세 갈래의 회담을 모두 일방적으로 중단 내지 연기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북한이 제1차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에서 팀스피리트 훈련중지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삼고, 이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직후인 이날 오후 3시 제8차 국회회담 준비접촉을 역시 팀스피리트 훈련문제를 구실로 중단시킨 데는 그들 나름의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것은 팀스피리트 훈련문제를 부각시켜 한국내에서 회담교

착의 원인이 이 혼련에 있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아가서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이 혼련을 중지 또는 축소해야 하며 주한미군과 핵무기도 철거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일게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이와함께 북한측이 문익환씨 문제를 구실로 두 갈래의 회담을 연기한 것은 그들이 정상적인 남북당국간 대화통로 보다는 우리 사회의 일부 재야단체나 인사하고만 대화하겠다는 이른바 『통일전선식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하겠다.

북한, 왜 대화를 연기했는가

남북대화에 관한 북한의 기본 의도

북한은 올해들어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과 체육회담에 잠시 호응하는 척 하면서 이와는 달리 다발적 대화공세를 펴왔다. 북한측이 최근까지 관심을 갖고 시도해온 대화는 정치협상회의를 비롯해 범민족대회, 학생회담, 작가회담, 노동자회담 등이다.

그 중 정치협상회의는 남한의 정당대표 및 개별인사인 7명(노태우 민정당 총재, 김대중 평민당 총재, 김영삼 민주당 총재, 김종필 공화당 총재, 김수환 추기경, 문익환, 백기완)을 상대로 개별적 협상을 하자는 것이고, 범민족대회는 일개 재야단체인 『전민련』을 상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또 학생회담은 학생운동권 단체인 『전대협』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회담이고 작가회담은 『민족문학작가회의』를 상대로 갖겠다는 것이며, 노동자회담은 『전로협』을 상대로 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통일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명분하에 남한의 일부 재야 단체들과 대화와 접촉을 가짐으로써, 남북한간 현안문제 해결의 실질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 정부당국간의 회담을 소홀히 하는 것은 통일문제에 관한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조장하기 위한 『통일전선식』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 1월 1일, 김일성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정치협상회의이다. 북한측 주장에 의하면 남북의 각당, 각

파, 각계층 지도인사들이 평양에 모여 그들이 제기한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중심의제로 협상을 갖자고 하면서 우리측 인사 7명을 초청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노태우 대통령을 대한민국 국가원수 자격이 아닌 민정당 총재 자격, 즉 정당대표의 한사람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그들이 표면적으로 여러 갈래의 대화에 관심을 보인 것같이 하면서도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체제부정적 태도가 명백하기 때문이다.

또한 회담을 제의하면서 상대측 대표를 일방적으로 지명·통보하는 것은 상호존중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더욱이 김일성 한사람이 남한측 대표 일곱 사람과 만나겠다는 발상도 무례하고 상식밖의 주장이다.

더군다나 회담의 의제를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으로 제한하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 독단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북한의 정치협상회의 제의가 오만불손하고 근본적으로 문제점과 모순을 안고있음에 따라 우리측 4당대표와 김수환 추기경은 이를 묵살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문익환, 백기완씨는 지지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문익환씨는 마침내 북한을 방문하여 남북관계에 커다란 파문을 던졌다.

북한측은 문익환씨와 발표한 공동성명안에 『연방제가 필연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도』이고 『팀스피리트훈련과 남북대화는 양립할 수 없으며 교차접촉·교차승인을 반대한다』는 종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더욱이 북한측은 공동성명 제9항에서 『쌍방합의를 금후 남북 간 다각적 공식대화에서 협의의 기초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측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없는 일 개인인 『문익환』씨와의 합의사항에 최대의 비중을 부여하면서 이것을 향후 다른 남북대화의 기준과 규범으로 삼겠다는 태도는 책임있는 쌍방당국간의 대화를 통해서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국론분열에 주력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다만 문익환씨 사건 이전에 진행되어 오다가 북한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연기된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에서 북한측은 군사문제를 해결하자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바, 상호신뢰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문제해결이라는 명분으로 한국의 방위력약화와 남북군사력 균형의 파괴를 가져옴으로써, 한반도 공산화 여건을 조성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은 체육회담에도 두차례 호응해 왔는데 동 회담에서 90년 북경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남북단일팀의 명칭을 『고려』로 하자고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체육회담에서 남북단일팀 명칭을 『고려』로 합의한 다음 정치협상회의에서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남북대화에 관한 북한측의 기본 의도는 남한의 재야단체들을 상대로한 5개의 회담(정치협상회의, 범민족대회, 학생회담, 작가회담, 노동자회담)을 통해서 통일문제에 대한

국본을 분열시키고 사회혼란을 조장해 보자는데 있다.

이와함께 남한당국을 상대로 한 회담에서는 틴스피리트 훈련 중지, 주한미군 철수, 핵무기 철거 등 군사문제해결에 의한 안보 태세 약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체육회담을 통해서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실현을 위한 여건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북한이 남북대화를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상으로 보지 않고 『남조선혁명』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과 체육회담의 연기 배경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통일과 대화라는 명분하에 문익환씨를 특별기까지 동원하는 등 국빈대우를 하면서 그를 정치선전에 이용하였다. 북한당국은 한편에서는 우리 정부와 회담을 하는척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정부 몰래 문익환씨를 정치공작전 차원에서 평양으로 불러들여 자기들 주장을 정당화하고 정상적인 당국간 대화를 파괴하려는 양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29일, 북한측에 대해 이러한 그릇된 자세의 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문익환씨 문제를 빙자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계속 획책하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는 등 공공연한 내정간섭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았으며, 심지어는 정부전복을 선동하는 언동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경우, 북한측은 문익환씨에 대한 정치공작 행위가 폭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와같이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손쉬운 방편의 하나로 회담연기를 선언하고 나온 것이다.

이와함께 우리 정부의 문익환씨에 대한 사법처리가 부당한 것처럼 왜곡·선전해온 북한측으로서 회담연기라는 충격요법을 취함으로써, 남한사회에서 문익환씨 석방투쟁을 지원하고 고무하려는 데도 또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북한측이 회담을 연기하게 된 배경에는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문제가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북한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2개월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준비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어 초조한 상태에 있다.

이런 판국이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남북대화를 운영할만한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도 북한이 회담을 연기하게 된 이유로는 남한정세에 대한 관망과 5월의 중·소정상회담 결과를 지켜 보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하겠다. 북한은 5월 노사분규와 학생데모, 문익환씨 사법처리과정 등 남한정세의 추이와 한반도 문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중·소정상회담 등을 관망하면서 새로운 전술을 구상할 여유를 갖자는 것이다.

남북문제, 우리의 기본 입장은 무엇인가

『7·7 대통령 특별선언』의 바른 이해

6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에 관한 획기적인 『7·7 대통령 특별선언』을 천명하였다.

『7·7선언』은 분단이후 지속되어 온 남북간의 적대적 대결구조를 지양하고 동반자적 협력구조를 추구함으로써 대내적인 민주발전 노력과 함께, 통일·외교에 있어서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자는데 그 뜻을 두고 있다.

『7·7선언』은 크게 보아 북한 및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통일·외교정책의 전환이라는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7·7선언의 기본정신과 내용

『7·7선언』은 북한을 경쟁과 대결, 적대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민족의 일부로 포용하여 상호 신뢰와 화해,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나감으로써 북한을 민족공동체의 일부로 인식을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민족공동체 속에 남과 북의 2개의 체제가 실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고 상호 화해와 협력의 증진을 통해 민족통합을 지향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간의 관계를 독립된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한

민족공동체안의 특수관계로 보고 두 체제간의 개방과 교류, 협력을 통해 사회, 문화, 경제 부문에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통합을 이룩해 나가며, 이를 토대로 정치적 공동체로 발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일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그동안 쌓아올린 역량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여 고립·폐쇄적인 북한을 개방의 방향으로 적극 유도하고 북한에게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통일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통일정책과 남북관계의 큰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7·7선언』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내외 여건의 성숙이 전제로 되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첫째,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 우리 사회 내부의 성숙된 민주역량이 공감하고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로 상대측인 북한이 『7·7선언』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에 호응하는 자세를 보일 때에만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대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적대·대결관계를 화해·협력관계로

남북간의 적대·대결관계를 화해·협력관계로 전환시키려는 것은 남북대화에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의 요체는 남과 북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대화를 진행하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책임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쌍방 당국간에 대화의 통로가 확고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가 쌍방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의 개최를 추진하고 나아가 남북정상회담의 실현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쌍방 당국간의 대화를 외면하거나 상대방의 실체를 부정하는 가운데에서는 어떤 실효성있는 대화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한 당국차원이 아닌 민간차원의 다각적인 대화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다. 남북간에 진행된 바 있는 남북적십자회담, 남북체육회담 등은 각기 해당분야를 대표한 대화통로들이다.

40여년동안 이질화가 심화된 남북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민족적 유대를 회복하자면 상호 문호개방과 다각적인 교류·협력의 실현을 거쳐야만 할 것이다.

『7·7선언』에서 남과 북이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분에 걸

쳐 교류를 실현해 나갈 것을 천명하고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이산가족들의 고통해소를 적극 주선·지원하며 남북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남북관계 개선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입장에서 정부는 남북당국간회담을 통해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현문제를 협의하고, 이와 아울러 정부와의 협의와 보장하에 해당 분야의 단체나 전문인사들의 접촉과 교류를 주선하고 지원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을 향한 우리의 진로

건전한 통일의지의 결집—정부의 실천조치

그간 우리의 경제발전 노력과 민주화를 향한 진전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관심이 과거 어느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적극 수렴하여 통일정책으로 가시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우려 왔다.

국민들의 건전한 통일의지가 표출되고 이러한 의지가 정부를 통해 결집되어 정책화될때, 통일의 길은 그만큼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 사회에 대한 도착된 환상적 인식과 오관에서 비롯된 불순한 기도를 포기하고 화해와 협력의 새 마당으로 나오게 하는 길이 될 것이다.

정부는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의 새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당국간에는 물론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이미 취해나가고 있다.

『7·7선언』발표이후 정부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해외동포의 남북한 자유왕래 허용, 남북간 물자 및 경제인 교류 등에 관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며, 적극적인 남북교류 협력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안』을 성안하여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또한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문제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체제를 정비하였다.

북한도 인식의 대전환을

남북간에 공식 차원의 대화가 열리기 시작한 지도 근 20년이 되었다.

그러나 민족의 화합과 통일은 남북이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질 때 그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의 대화 경험에서 얻어진 참교훈이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책임과 권능을 가진 쌍방 당국간의 대화로써 그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민간차원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펼쳐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남북대화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쌍방간에 합의된 사항은 성실히 준수되어야 하며, 회담과 관계가 없는 엉뚱한 문제, 즉 『회담외적문제』를 가지고 회담 진행을 어렵게 만들거나 또는 회담을 중단시키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 문익환씨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 내의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획책하고 법제도의 철폐와 구속자 석방을 주장하는 등 공공연한 내정 간섭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상호존중원칙에 어긋나는 일로써 남북대화에서 마땅히 버려야 할 자세인 것이다.

또한 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 그리고 정상적인 당국간 대화통로는 외면한 채 우리 사회의 아무런 대표성도 인정할 수 없는 일부 재야단체만 일방적으로 선별하여 무슨 대회같은 것을 해보려는 태도는 대화의 진정한 자세가 아니며, 정치공작과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자는 것일 뿐이다.

이제 북한은 대화와 화해의 가면을 쓰고 우리의 민주화 추진과 통일논의의 개방화를 틈타 사회를 혼란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전술로서 우리 체제에 무모한 도전을 더이상 계속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남북간의 대결과 긴장을 고취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 민족공동체를 부활해 나가야 할 민족적 과제 앞에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다.

북한측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이제라도 대화를 정치공작적 차원으로 이용하는 불순한 행동을 중단하고 정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화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민족공동체의 형성과 발전

평화통일은 분단되고 훼손된 민족공동체를 단순히 재결합하고 원상복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재하는 현실의 민족공동체를 모태로 하여 진화·발전된 민족공동체를 새롭게 형성하며 탄생시키는 그야말로 다시 태어나기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족공동체의 새로운 형성을 위해서는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인식과 함께 민족공동체가 처해있는 현실상

황에 대한 올바르고 정확한 인식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확립 되어야 한다.

또한 민족공동체를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작업은 다른 민족이 나 나라간의 문제가 아니고 같은 민족간에 하나의 공동체를 새롭게 형성하기 위한 과제인 만큼, 경쟁이나 대결에 의한 승패 로서가 아니라 반드시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이 불가결의 요소로 되어 있다.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을 이룩하는 지름길은 쌍방 당국간에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며, 그 실질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에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고 이를 축적하여 사회·문화·경제공동체, 그리고 정치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대망의 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남북대화 어떻게 되고 있는가

1989년 5월 8일 인쇄

1989년 5월 10일 발행

발행 : 국 토 통 일 원

(720-2146)

인쇄 : 농 원 문 화 사

